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7일  
미래·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6월 1일

나. 제 안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3. 6. 27.)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의약과장 장진수)

###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음주폐해 예방 교육·홍보 관련 사항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금주구역 운영 관련 사항 등 규정 (안 제5조)

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다.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34조
-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3. 29. ~ 4. 18.) 결과: 의견없음
- 2)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개선의견 반영
  -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해당 조항 앞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구분	원 안	개 선 안
내용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구청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3)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개선의견 반영

- 보건복지부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음주폐해 예방』 (2022년)에 따르면, 음주행위의 결과를 비롯하여 음주 계기, 음주율, 폭음률 등과 같은 지표에서도 인구지형·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sup>1)</sup>에 따라 이를 고려하도록 함

1) 예시 : 고령, 관광지, 취약계층 지역 특성별 음주율, 주취 사건사고, 음주운전 등

구분	원 안	개 선 안
내용	<p><b>제7조(교육 및 홍보)</b> ① 구청장은 <u>구민에 대한</u>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p>	<p><b>제7조(교육 및 홍보)</b> ① 구청장은 구민의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u>고려하여</u>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p>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 가. 개정취지

-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sup>1)</sup>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서 규정된 금주구역의 지정<sup>2)</sup>에 따른 운영 및 예외적인 허용 사항[지역축제 및 행사]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중 어린이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안 제7조**에서는 국민의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절주 및 금주교육,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 그리고 이를 위한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안 제11조**에서는 법령에 위임된 과태료<sup>3)</sup>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여, 금주구역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마련하고자 함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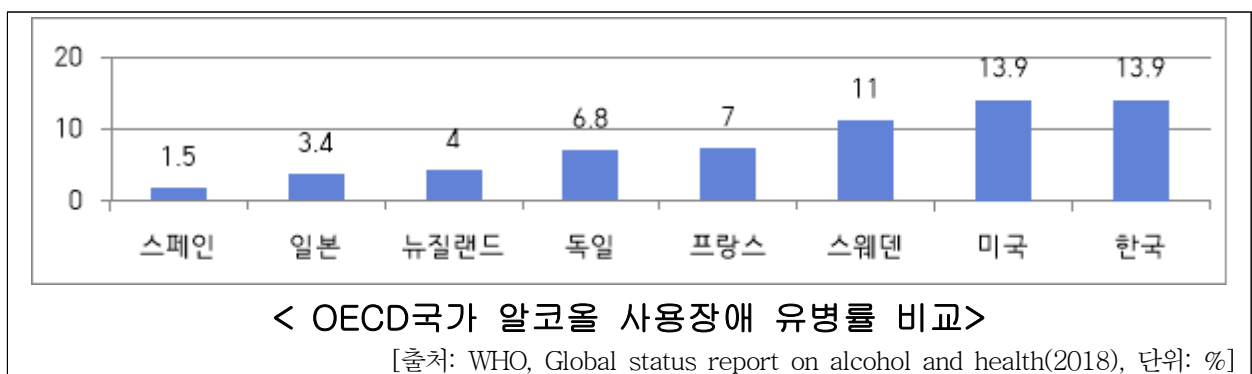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다. 종합의견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일 14.1명이 알코올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sup>4)</sup>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출처: 통계청, 2020년 사망원인 통계 (2021)

- 이에 정부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주류 접근성을 제한하고 음주조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본 개정안 역시 조례에 위임된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절주 및 금주교육을 통해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 아울러 금주구역 지정 시 합리적인 논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차후 금주구역 내에서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생략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6. 30.] 제8조의4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2011.6.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2020.12.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7.12.3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목개정 2016.12.2]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7., 2017. 5. 29., 2018. 12. 18., 2021. 6. 15.>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11. 12. 6.]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30.>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u>다.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u>	<u>법 제34조 제3항제1호</u>	<u>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u>		